

‘파행·대립’ 4월 임시국회 결국 민손 종료

한국당, 장외 ‘민생투쟁’...여야, 北 발사체 놓고도 대립 오늘 與 원내대표 경선 분수령...5월 임시국회 소집 주목

파행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4월 임시국회가 분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7일 민손 종료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여야의 대립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본격적인 장외 ‘민생투쟁’을 선언하는 동시에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를 거듭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선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민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장의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홍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내부 단합을 위해 지금 상황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국회 정상화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투쟁적 장외집회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민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며 개혁논의 재개를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제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

에 귀를 기울여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다음날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냉각기를 거친 후 내주께에는 추경심사 및 민생현안을 고리로 국회 정상화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장외집회를 계속 온 한국당은 이날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을 바꿔 전국 순회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짜위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선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선행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주인’은 없고 ‘손님’만 북적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분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7일 종료됐다. 이날 국회에 견학한 방문객들이 텅 빈 분회의장을 사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중복세력 분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 당시 정부에 대해 비판 여론을 ‘중복’, 세월호 유가족을 ‘중복세력’으로 각각 분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7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지난 2014년 4월21일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 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중복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문건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활동 중점 항목으로는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반정부 활동 조장 중복좌파 동성 확인’, ‘사이버상 북·중복좌파들의 여론 호도 행위 수집’ 등을 명시했다.

또 진도 및 경기 안산 지역과 사이버 활동에 각각 기무사 요원을 배치해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반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세력의 준말인 듯) 차단’,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반체제 징후 포착’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5월13일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중복세력 반정부 활동에



대비 김요’ 문건에서는 ‘세월호 참사 시민 촛불 원탁회의’를 ‘중복세력’로 지정하며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선동’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는 ‘중복세력 활동 침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면서 사령부가 ‘602부대를 통해 중복세력 집회·시위 계획 입수 후 항군에 전파 중’이라고 적었다.

같은 해 5월30일자 ‘중복세력 불복집회 확산지도 차단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력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거론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은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에 중복 프레임으로 대응해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용납할 수 없는 패륜 행위이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현정질서 파괴 범죄다.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박주선 “광주 동구 일대, 전통시장 지원 선정”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동남)은 7일 광주 동구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선정한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조선대 장미의 거리’, ‘패션의 거리’가 선정됨에 따라 각 사업별로 1년간 최대 3억원(총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에 ‘지산유원지 상점가’가 선정돼 1천6백만 원 지원받게 됐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인예술시장’이 선정돼 향후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특성화 사업이 이제 도심 재생 뉴딜사업과 발맞춰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 있고 균등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관련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전통시장·골목상권 기반 조성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정체성 5월말-6월초 결론내야”

내주 끝장 토론 제안...“국민에 부끄러운 민낯 죄송”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산갑·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이 당내 내홍과 관련해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라며 “다음주 초 끝장토론을 갖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권은희(광산을), 박주선(동남을) 의원은 7일 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지역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이 국민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려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은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갈라서든지, 아니면 화학적 결합, 물리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음주 초계 끝장토론을 벌여 (내부 정체성을) 판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내용으로 인해 정체성이 분리돼 민주평화당과의 제3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민주평화당과의 문제는 나중의 일로, 바른

미래당 내부 정리가 먼저다”며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어느 지역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곳이 호남인데 제대로 된 야당, 대안정당이 만들어지면 정치지형이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다당제 취지를 내세워 제3지대론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바른미래당의 분당에 무게를 실었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야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

화당이지만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을 청취해보니 내일모레 해체될 당장에 지지를 주지 않는다고 의견이 모아지더라”고 말했다.

또 내년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인생의 황금기는 60-70세라고 본다”며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5·18 진상규명에 필요한 미국 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김대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김순은 위원장 취임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임 김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는 꼭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

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전국자치(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지난 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같은 해 3월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올 3월 12일부터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왔다. /김진수기자

오천경매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경매투자자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오천경매
010-3605-5000